21세기, 한국의 사회과학과 복음적 분업*

백 종 국
경상대학교 교수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 성경 -

"스스로 묻건대, 우리는 진정 세계가 단지 '정글의 법칙' 만으로 지배되는 세계 시장이 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우리는 정말로 세계 앞에서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는가." - 프랑수아 미테랑 전(前) 프랑스 대통령 -

1. 서론

21세기에 펼쳐질 한국 사회과학을 예측하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쯤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우선 21세기에 펼쳐질 역사적 상황을 예측하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바이지만 확실히 역사는 예측이 힘들다. 칼 포퍼의 역사적 결정론 비판이 지적하는 바처럼 인간의 불완전성으

* 본 논문은 "21세기와 한국 기독교 학문의 과제," 기독교학문연구소 창립기념 강좌, 2000년 2월 25-26일, 사랑의 교회 소망관에서 발표한 논문을 대폭 수정한 것입니다.

로 인하여 인간의 역사적 지식도 지극히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관심의 대상이 자연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더욱더 예측하기 힘들다. 여기에다 한치 앞도 예견하기 어려운 한국의 상황을 다루는 과학에 대한 예측이라면 이미 그 실패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에 펼쳐질 한국의 사회과학 양상을 고찰한다는 일은 단순히 흥미를 넘어 일종의 전율을 느끼게 할만큼 대단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 동물적 본능뿐 아니라 논리적 이성을 지녔다는 사실 때문에 사회과학의 향방은 해당 역사를 지배하는 커다란 힘이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역사의 거대한 실험으로 막을 내린 공산주의 체제라고 할 수 있다. 대략 1910년경에 출발하여 1990년경에 소멸된 이 실험은 특정한 사회과학 이론이 어떻게 인간과 그들이 만든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무분별한 적용이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를 불러일으켰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한국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1] 21세기의 한국에 어떤 종류의 사회과학이 지배적이 될 것이냐는 학문적 흥미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것이다.

본 주제에 대한 전략적 접근의 첫 고리는 21세기 사회가 가질 제반 양상에 대한 토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 세기말적 논의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21세기의 사회에 대한 미래학자들의 토론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는 이러한 추세에 대해 한국의 사회과학계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21세기 사회를 이끌 원동력들에 대한 한국 학자들의 연구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보화와 탈산업화 등 갖가지 주장이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의 논의가 진행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깊이 감안해야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일종의 문헌비평이라고 할 수 있다.

1) 박광주 편, 『신자유주의와 아시아의 경제위기 그리고 한국』 (부산: 부산대학교출판부, 1998); 백광일 · 윤영관 편, 『동아시아 위기의 정치경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에 나온 윤영관, 박광주, 백종국, 김진영, 이호철, 정진영 등의 논문 참조.

현재의 추세를 기준으로 한다면, 불행하게도, 21세기에 진행될 한국 사회과학의 전망은 의외로 간단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한국의 사회과학 경향이란 구미에서 진행될 사회과학적 경향을 약간 축약하여 (telescoping) 한국어로 바꾸면 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한국 사회과학의 수입 학문적 성격 때문이다. 한국의 사회과학은 과거에도 그렇듯이 앞으로도 수입 학문적 성격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과거처럼 외부로부터 닫혀있는 사회 안에서도 한국의 사회과학자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역사적 질문과 답변에 충실하지 못했다는게 한국 사회 과학자들 자신의 고백들이다. 하물며 21세기의 개방된 국제화 사회에서 한국의 사회과학자들이 자신의 문제들을 스스로 발견하고 탐구할 뿐 아니라 인민들이 원하는 적절한 답을 찾아낼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힘든 처지이다. 그러나, 일말의 가능성은 있다. 이 점이 본 논문이 탐색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 일말의 가능성과 그리스도의 복음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하러 사회과학을 하느냐에 대한 반성과 고찰은 이미 로버트 달 교수가 오래 전에 작성했던 후기 행태주의자 선언에 잘 나와 있다. 이 선언의 핵심은 '적실성(適實性, relevance)' 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다. 여기에 약간의 기독교적 세계관을 첨가하여 보면 그 의미는 더욱 더 명료하게 드러나는데 이러한 방향은 반드시 기독인 사회과학자가 아니더라도 한번쯤 고찰해 볼 만한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이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한다. 첫째는 사회과학의 특징에 대한 일반적 요약이다. 사회과학이란 학문에 대한 일반적 합의를 정리해봄으로써 왜 사회과학자들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는 것이 허용되며 중요한지를 간단히 언급해보고자 한다. 둘째는 복음의 역사성에 대한 고찰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지는 보편성과 역사성은 우리가 흔히 빠뜨리기 쉬운, 그러나, 무지의 비극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찰해야하는 부분이다. 셋째는 복음적 분업에대한 토론이다.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학문 분야에서 나타나는 '매개의 변증법' 에

말려들어감으로 고통 당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한다. 이와 더불어 학문적 분업이 취해야할 거시적인 틀이 다뤄지게 될 것이다.

2. 세기말적 담론(談論)으로서 '21세기 사회'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21세기 사회' 나 '세계화' 란 용어는 근본적으로 세기말적 담론이라는 보편적 현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세기말의 담론은 인간의 시간성과 밀접한 관 계가 있다. 우리가 인식하는 시간(時間)이란 불가역적(不可易的)이며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2] 하지만 인간의 인식체계로 보아 주어진 삶의 장내에서는 시간도 가역적일 수 있으며 따라서 예측이란 거의 불가능한 것임을 보여주는 현상이 다수 존재한다. 여하튼 인간이 어떤 현상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일정한 전제하에서 그러하다. 엄밀히 검토해보면 많은 경우에 이러한 전제들은 실제의 시간 속에서 거의 무의미하지만 그러나 현실은 의미를 준다. 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가 지적하였듯이, 시간은 오로지 인간의 인식에 의해서만 의미가 주어질 뿐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세기말이라는 것도 인간이 측정하는 일정한 단위의 시간에 인간 스스로 의미를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 1999년의 12월 31일 자정과 2000년의 1월 1일 새벽 0시는 같은 시각이지만 많은 인간들에게 새로운 의미를 주는 서로 다른 시대의 분기점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21세기 사회' 나 '세계화' 를 마치 어떤 새로운 현상인 것처럼 다루는 이면에 이러한 세기말적 증상이 숨겨져 있지나 않은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 시대를 다루는 '21세기 사회' 의 담론 안에는 소위 문명사관(文明史觀)이라고 불리는 일련의 토론들이 보여주었던 바가 반복되고 있다. 전환기, 세기의 문턱, 역사적 도전, 대응, 위기, '시

2) 선한용, 『성 어거스틴에 있어서 시간과 영원』 (서울: 성광문화사, 1986, 1994)과 Peter Coveney and Roger Highfield, *Arrow of Time* (London: Virgin Publishing, 199), 이남철 옮김 『시간의 화살: 시간의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과학여행』 (서울: 범양사, 1994) 를 참조할 것.

급한' 등이 자주 사용 되는 담화체계이다. 좀 더 자세히 고찰해 보면, '세기말 증상' 론이나 '위기의 시대' 론(김호기, 1994, 109쪽)이 빈번히 진행되고 있다. 이 '세기말적 징후' 로서는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과 절망감, 소외와 고독, 압도적인 불모성과 희망 없음의 뿌리"가 거론되기도 하며, 종래에는 "인류가 쌓아올린 문명의 세계는 결국 파국을 맞을 것인가" 라는 의문이 당연히 제시되기도 한다(장석주 1993, 232쪽).

19세기 말 유럽의 세기말적 위기의식은 이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다. 다닐레프스키나 슈펭글러에서 시작한 유럽문명의 위기와 새로운 역사의 도래는 많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그들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연구를 진행한 토인비(Arnold J. Toynbee)의 견해에 따르면, 세기말 혹은 문명의 말기에는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 하나는 복고 주의(復古主義, archaism)이며 다른 하나는 미래주의(未來主義, futurism)이다(Toynbee 1973, 1-168쪽). 복고주의란 과거의 영광을 사모하는 태도이고 미래주의란 황홀하게 전개될 미래에 대한 기대를 의미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두 태도는 두 가지 점에서 일치한다. 첫째는 변동하는 문명의 내용에 비해 문명의 제도가 따라가지 못할 때 발생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이 추세가 둘 다 현재에서의 도피라는 점이다. "미래주의와 복고주의는 둘 다 공통적으로 지상이라는 현실적 공간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빠져 나와 그와는 다른 종류의 시간을 채택하려는 시도들이다(Toynbee 1973, 97쪽)."

최근의 한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21세기 사회' 라는 담론이 토인비가 지적하는 미래주의(未來主義)적 태도와 보편적 성격을 공유하고 있는지는 이제 고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현상은 이 담론이 거의 과잉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담론을 하나의 정책으로 삼은 한국정부의 문헌이나 이를 주요한 주제로 반영하려는 한국의 언론들은 말할 것도 없다.

3. '21세기 사회'의 특징

21세기를 보는 많은 논자들은 다음 두 가지의 경향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첫째 경향은 새로운 개념의 홍수에 압도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새로운 시대의 개막에는 새로운 언어가 필요할 것이다. 과거의 개념으로는 미래의 현상을 정의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더 많은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보인다. 이 경향은 불가피하게 개념적 정의의 소홀을 낳고 있다. 왜냐하면, 그토록 방대한 신조어들에 대해 엄격한 정의를 내리려면 그 작업만으로도 아마 그 문헌의 성격은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박길성 교수의 논문(박길성 1994)은 방대한 신조어(新造語)의 보고(寶庫)이다. 보편적 인류공동체, 세계사회, 전지구적 역사문명, 근대성의 담론, 세계성의 담론, 초국적 결사체, 글로벌 경제, 글로벌 문화, 문화의 무국적, 제3의 문화, 파편화, 국제인, 세계도시, 글로벌 정치, 세계정치, 전지구적 상호 연관, 지구적 지배, 문화순수주의, 범세계적 의식, 경제적 조절체, 일방성 귀결, 세계적 네트워크화, 기업시민, 글로컬리제이션(glocalization), heterarchy, 적소 전략, 위계적 조정비용, 문화자본, 탈맥락화, 재맥락화 등을 들 수 있다. 분명히 한국인이며 교양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짐작의 범람이야말로 언어를 타락시키는 시작이 될 수 있다. 특히, '다연적 팽창(51쪽)' 처럼 국어사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신조어(新造語)의 남용을 보면 '21세기 사회'란 "전지구적 상호의존의 심화(43쪽)"라는 그의 21세기 사회 정의가 여타의 논자들과 유사한 언어체계를 사용하고 있는지조차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여타의 연구들에서도 신조어들의 남용과 외래어의 무분별한 차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다원주의적 탈자본주의, 안보복합체, 자생적 세계화-관리적 세계화, 관계적 민감성, 비차별성, 확산적 상호주의, 전략적 공세주의- 전략적 상호주의, 개방지역주의, 경제시민모델, 세

계시민의식, 지역할거주의, 네가티브 섬, 듀티프리숍, 상품체인모델, 니치이코노미 등을 들 수 있다. 김호기 교수의 연구(김호기 1994, 115쪽)에서도 '탈근대, 근대, 전근대의 3대 세력간 문명간 전쟁' 이라는 짐작만이 가능한 개념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

아직 증명되지 아니한 가설의 명제적 사용도 신조어만큼이나 '21세기 사회' 의 이해를 흐리는 주요한 원인이다. 방대한 신조어를 사용하는 박길성 교수의 논문(박길성 1994)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사실은 국내정치와 국제정치라는 전통적인 구분의 폐기를 내포하며 또한 일정한 개념의 재조정을 요구한다(56쪽)" 든가, "오늘날 현대국가는 더 이상 자족적인 정치적 단위가 아니며 더 큰 상위체제, 이를테면 세계적 규모의 정치체제, 국제경제체제, 세계사회의 하나의 부분일 따름이다(57쪽)", 혹은 "세계화는 특정지역이나 특정인과 관련된 어떤 내용이나 지식보다는 타지역이나 타인을 평가절하 없이 객관적으로 취사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67쪽)" 는 식의 선언이 발견되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가설들은 이미 증명 되었다기보다는 증명받기 위해 제출되어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가설을 명제화한 연구에서조차도 이를 증명할 근거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한국에서 21세기 사회를 다루는 대부분의 문헌들은 서구 미래학자들의 저작에서부터 자신의 토론을 시작하는 경향이 있다. 때로 그들과 동의하고 때로 그들과 동의하지 않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의 저작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토플러(Alvin Toffler), 헌팅턴(Samuel P. Huntington), 후쿠야마(Francis Fukuyama), 드럭커(Peter F. Drucker), 케네디(Paul Kennedy) 등은 비교적 자주 이용되는 학자들이다.

헌팅턴은 21세기 사회가 문명의 충돌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에 진행되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국제적 상호의존을 증대시키고 있다. 증대된 상호의존은 근대 세계의 가장 주요한 행위자였던 민족국가의 영역을 축소시킴으로써 권위적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 이

러한 공백은 점차 인간 사회의 본성에 속하는 문명적 요소 - 종교, 종족, 언어, 관습, 역사 등 - 로 채워지게 될 것이다. 이로써 지구는 7, 8개의 문명권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이 문명권들은 새로운 '문명의식(civilization consciousness)' 을 부추기고, 경제적 지역주의 등과 더불어 문명간의 적대감, 특히 서구문명에 대한 적대감을 강화시킬 것이다. 이 적대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 정치적 · 제도적 차이보다는 훨씬 더 본질적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미시적 차원과 거시적 차원에서 구체적인 갈등이 증가할 것이다. 비서구 문명권이 서구 문명권에 대해 집단적 위협을 가할 때를 고려하여 서구 문명은 일정한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후쿠야마가 제시하는 '역사의 종언' 론은, 유 박사의 정리에 따르면, 헌팅턴에 비해 훨씬 추상적이며 규범적이다.

후쿠야마의 견해에 따르면, 인간을 움직이는 동인(動因)은 '자기보존을 위한 욕구' 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이다. 후자로 인해 전쟁이 발생하며 '지배-피지배의 관계' 가 발생하고 있었다. 만일 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가 항구적으로 해소되는 상황이 있다면 이 순간에 '역사' 는 종언을 고하게 된다.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사회는 이 욕구를 항구적으로 해소시켜주는 사회이다. 이 사회에서 과거의 지배와 피지배 관계는 사라진다. 그러므로,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의 전지구화는 바로 역사의 종말을 의미한다. 실제로 헤겔(Hegel)과 코제프(Kojève)는 1806년에 있었던 예나 전투가 역사의 종말을 가져왔다고 주장 했다. 이 전투에서 프랑스가 승리함으로써 '자유와 평등의 원칙' 이 보편적인 가치로 자리잡게 되었기 때문이다. 후쿠야마와 헤겔이 다른 바는 이 시기가 1806년이냐 혹은 1989년이냐는 점이다. 후쿠야마의 주장에 따르면 '자유와 평등' 을 대표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이 시기 동안에 파시즘이나 마르크스주의와 경쟁하고 있었던 것이다. 1989년에 최종적으로 마르크스주의가 파멸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는 이제 인류의 보편적 정신으로 확고히 자리잡게 되었다. 이제부터 역사는 예술과 철학의 필요성이 소멸되고 대신에 산술적인 경제적 이해만이 지배하는 지루한 시기로

접어들었다고 후쿠야마는 믿고 있다.

드럭커는 '21세기' 사회를 지식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되는 사회로 보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는 세 단계를 거쳐 지식사회로 이전하고 있다. 첫째 단계는 지식이 생산의 공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발생한 산업혁명의 단계이다. 둘째 단계는 '새로운 의미의 지식이 작업 그 자체에 적용' 되어 발생한, 테일러리즘(Taylorism)으로 대표되는, 생산성 혁명의 단계이다. 셋째 단계는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연금기금(pension fund)을 기반으로 '지식이 지식 그 자체에 적용' 되어 발생한 경영혁명의 단계이다. 이러한 추세는 자본주의와 민족국가로 대변되는 구시대적 조직을 근본적으로 붕괴시키고 새로운 지식사회의 조직을 요청하게 된다. 민족국가를 중심으로 본다면 새로이 발생하고 있는 범국제주의, 지역주의, 그리고 종족주의가 바로 이러한 경향의 표징(標徵)이다.

토플러는 1970년에 발간된 『미래쇼크(*Future Shock*)』를 필두로 하여, 『제3의 물결(*The Third Wave*)』, 『권력이동(*Powershift*)』 등의 미래학 저서들을 양산해내고 있다. 이 중에서 『미래쇼크』는, 비록 뒤의 저작들에서 많은 수정을 가하고 있으나, 그의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저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토플러의 관심은 변화의 '방향' 이라기보다는 변화의 '속도' 이다(토플러 1970, 13쪽).

현대사회는 미래로의 이전에서 과거의 변화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 가공할만한 속도의 주요 원인은 기술의 급속한 진전이다. 기술은 자기 보완적 3단계 주기를 가지고 있다. 기술적 아이디어가 창출되고, 응용되고, 보급되는 것을 말한다. 이 단계간의 거리가 점차 빨라짐으로써 기술의 주기도 점차 단축되고 있다. 이 단계를 단축시키는 원인은 점차 빨라지고 있는 지식의 변화 속도이다. 인류 역사를 보면 지식은 나선형으로 된 상승의 곡선을 그려왔다. 이 지식의 나선형 상승곡선은 컴퓨터의 발달로 말미암아 거의 수직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지식의 급속한 발달은 기술의 급속한 진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기술은 역사상으로 "인간의 총체적인 지적

환경, 인간의 사고 방식과 세계관을 변화시킨다(토플러 1970, 44쪽)."

『미래쇼크』만으로 평가하자면 토플러의 견해는 지나치게 단순하고 순환적이다. 그의 저작은 미래 사회를 예견하게 하는 신조어와 사실들로 가득 차 있으나, 핵심은 기술이 변화를 주도하고 우리는 이 기술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기술 변화의 독립변수는 지식인데, 이 지식 변화의 주요 독립변수 중 하나가 기술의 산물인 컴퓨터의 발달이다. 그러므로, 지식은 기술을 급변시키고 기술은 지식을 급변시킨다. 이러한 순환적 고리가 어느 정도 사실이라면, 이 순환의 속도를 결정하는 제3의 변수가 매우 중요하다. 역사는 이러한 순환적 고리가 여러 차례 존재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토플러가 강조하듯이 각 시대의 순환 속도는 서로 달랐다. 그러므로 각 시대의 순환속도를 결정한 그 변수가 문제의 핵심이 될 것이다. 토플러가 그의 다른 연구에서 이 점을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토플러에 비하면, 인구폭발과 기술혁명 그리고 지역간 불균등성을 중심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케네디의 견해는 좀더 신뢰할 만 하다. 케네디에게서 가장 현저한 변수는 21세기 전반에 이르러 100억 명에 달할 세계인구이다. 지금 인류가 처한 상황은 1798년 맬서스(Thomas Malthus) 목사가 『인구론』을 저술할 당시보다 훨씬 급박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21세기의 감당하기 어려운 인구폭발은 이에 걸맞는 식량과 주거, 생활환경, 교육, 직업, 제도 등을 요구할 것이다. 문제는 맬서스의 경우에서처럼 다양한 요인들, 특히 기술혁명이 이 인구의 압력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냐는 점이다. 사태는 상당히 우려할 만하다. 왜냐하면, 기술 혁명은 그 자체가 환경파괴라는 부정적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또 지역에 따라 불균등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작 기술혁명이 가장 필요한 제3세계 지역은 낙후되어 있다. 기술혁명의 성과는 점차 더욱 서구사회에 편중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로써 국제적 빈부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적 노력은 양 지역에서 모두 기득 세력들에 의해 봉쇄당하고 있다.

헌팅턴, 후쿠야마, 드럭커에 대한 요약과 필자의 토플러, 케네디에 대한 요약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 있다. 그것은 '21세기 사회' 라는 최근의 변동이 주로 기술의 발달에 의해 좌우당한다는 신념이다. 토플러처럼 기술의 발달에 압도당하는 경우도 있고, 케네디처럼 냉정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기술의 발달 속도와 방향임이 확실하다.

우리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급속한 기술의 발달과 그 기술의 광범위한 영향에 대한 감동을 자주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산업혁명기는 대표적이다. 이 시기의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진행되는 기술의 발달과 그 영향에 대체적으로 압도당하고 있었다. 당황과 분노, 기대와 희망이 중첩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흥미롭게도 현재의 미래학자들과 산업혁명기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어떤 특정한 견해를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어느 역사적 시점에서 특정한 기술의 발달이 앞 시대와 뒷 시대를 구분하는 문턱이 된다는 견해이다. 역사에서 보편적으로 관찰되는 기술의 발달이지만, "요약하자면, 산업혁명은 선악과를 맛본 하와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세계는 결코 이전과 같지 아니하였다(Landes 1969, 12쪽)."

19세기의 세기말 논쟁과 20세기의 세기말 논쟁이 낙관주의와 비관주의, 혹은 이론적 천착을 통한 문제의 회피로 나뉘는 것도 유사하다. 헌팅턴과 케네디가 우울한 예언자인 맬서스의 예를 따르고 있다면, 토플러와 후쿠야마는 낙관에 가득찬 고드윈(William Godwin)의 예를 따르고 있고, 드럭커는 무미건조한 이론을 즐기는 리카아도(David Ricardo)의 예를 따른다고 말할 수 있다.[3] 요컨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역사의 성격 중에서 어떤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전체적인 논지의 특징이 결정되고 있다.

3) 고드윈 목사는 1793년에 『정치적 정의(*Political Justice*)』라는 책을 저술하였다. 이 책에서는 그는 인간의 이해력과 자기개선능력의 증대 그리고 지식면에서의 돌파구 등으로 언젠가는 훌륭한 세계 – 공정하고 범죄나 질병이 없고 심지어 전쟁 조차도 없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Robert L. Heibroner, *The Worldly Philosophers: The lives, times and ideas of the great economic thinkers, Fourth Edition* (New York: A Touchstone Book, 1972), 75쪽.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21세기 논의는 인간들이 스스로 정한 시간대의 전환점에서 나타나는 '세기말적 증후군' 중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정보화라는 현상이 20세기와 21세기의 전환점에서 단속적이고 혁명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컴퓨터의 발달을 구태여 21세기의 배타적 내용으로 규정할 필요도 없을 뿐 아니라 이 20세기에 진행된 컴퓨터의 발달이 2세기에 진행되었던 종이의 발달만큼이나 인류 사회의 정보화에 충격을 주고 있는지도 확실치 않다. 요컨대, 기술적 발달은 인간 사회의 외피를 구분 짓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인간 사회의 본질은 별로 변하는 게 없다는 것이 우리의 오랜 지혜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의 학자들이 21세기 사회의 내용에 대해 이 미래학자들의 영향을 받게되는 것은 당연하다. 예컨대, 기술의 발달을 축으로 삼고 이것이 파생시키는 다양한 현상들을 검토하는 작업들이 진행된 바 있다. 본 연구가 이러한 미래학자들과 국내학자들의 견해를 비교할 때 가장 관심을 가지는 사항은 이론의 역사성에 관한 것이다. 어떤 학자의 견해는 자신이 처한 시대의 문제에 관한 인식이며 해답임이 분명하다. 위에서 언급한 미래학자들은 대부분이 미국인들로서 미국의 시대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미국의 처지를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고 미국의 대응책을 분석의 종점으로 만들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정당하게, 한국의 학자들이 마땅히 한국의 처지를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고 한국의 대응책을 분석의 종점으로 만들 것이라고 기대해 볼 수 있다. 이 분석 틀을 비교하는 것이 본 연구의 관심사였다.

4. 21세기의 한국 사회과학 동향

일반적으로 어떤 나라의 사회과학이 21세기에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는 21세기 사회에 대한 예측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일반적으

로 어떤 시대의 사회과학은 그 시대의 문제에 대한 답변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만큼 어떤 나라의 사회과학은 일반적 경향의 변이(變異 variance)로서 더 특화되고 다양한 양상을 지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사회과학의 발전이 각 역사적 단계에 부응하는 답변으로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의 사회과학은 정치세력의 이데올로기적 도구로 형성되기도 하였다. 한국에서는 빈번히 어떤 정부 혹은 정치집단이 먼저 어떤 개념을 제창하고 이를 학계가 추종하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박정희의 '조국근대화' 나 '유신' 혹은 '새마을운동' 은 그 개념들이 권력자나 권력자 주변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였다. 그 다음에야 학자들이 참여하여 이 개념들의 합리성과 의의를 증명하는 노력을 기울였었다. 한 때 진보적 학계를 지배하였던 '사회 구성체 논쟁' 이라는 논쟁도 제일 먼저 소위 운동권 대학생들의 이론적 무장을 위한 자그마한 팜플렛들에서 시작하였다. 학자들이 이 논의의 의의와 논리적 구조를 규명하기 시작한 것은 운동권이 사회 내에서 상당한 세력으로 성장하고 난 뒤의 일이었다.

학문외적 요소가 개념을 지배하면 반드시 언어를 부패시키게 되어있다. 예컨대, 정치구호의 지배는 언어를 부패시킨다. 어떤 언어가 가지는 역사상의 의미가 권력자의 의도를 위해 왜곡되기 때문이다. 지나친 개론형(槪論型) 저작의 지배도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연구의 초기에는 김학준 교수의 『한국정치론사전』식의 문헌해제나 김석준 교수의 『한국자본주의국가 위기론』식의 문헌비평적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어떤 학자가 개론형(槪論型) 나열에 지나치게 몰입한다면 그는 다른 사람의 사상을 도용하여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말을 그럴듯하게 둘러대는 '말장이(스페르몰로고스: *σπερμολογος*)' 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4]

---

4) *σπερμολογος*는 그리스의 속어로 원래 곡식을 따먹는 새나 쓰레기를 모으는 넝마주이를 가르켰다고 한다. 후에 위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다. 용례로서는 「성서」 중 사도행전 17:18을 참조할 것.

한국의 사회과학을 지배한 가장 대표적인 현상은 '수입학문' 이라는 점이었다. 한국적 상황에 대한 분석보다는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개념과 이론들을 경쟁적으로 수입하여 적용하거나 적용을 정당화하려는 경향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예컨대, 1978년의 『정치학회보』 제12집에 실린 논문들은 이미 한국정치학의 토착화를 한국 정치학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강조하고 있었다. 이 논집에 기고한 학자들은 1970년 이후의 한국 정치학계의 경향을 "'引用' 의 시대에서 '創意' 의 시대로(139쪽)" 거나 "토착화를 위한 반성기(163쪽)" 라고 부르고 있었다.

불행하게도 한국 사회과학의 추세를 보면 이러한 과거의 반성이 '토착화' 되어 있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극히 최근까지도 수입된 개념의 무절제한 복사가 대세를 이루고 있었다. 근대화론에 대한 반성으로 정치학의 토착화가 진행될만한 시기에 갑자기 마르크스주의의 수입경쟁이 학계의 상당부분을 지배하였던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그토록 선배들의 '수입학문' 을 비난하였던 젊은 학자들 중 상당수가 누가 정통 마르크스주의를 수입하느냐는 경쟁에 몰입하였던 사실이 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한국 사회의 문제가 비이성적이고 전통적인 정치문화에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성의 존재를 회의하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하는 소위 "탈 - 주의(Post - ism)" 가 대단한 유행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21세기에 대한 사회과학의 문헌들이 경쟁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미래학자들의 논지는 사실상 매우 산만하고 나열적이며 자극적일 뿐이다. 더구나 이들의 논지는 미국의 처지라는 역사적 인식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미 지적한 바처럼, 한국이라는 민족공동체가 미래의 방향으로 채택할 만한 내용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인' 이 제기한 '새로운 것' 이라는 이유로 각 문헌에서 매우 권위있게 인용되고 있었다.

한국의 사회과학이 21세기에 이러한 경향을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다. 21세기의 국제화 경향을 '수입학문화' 의

정당화 기제로 삼을 가능성이 더욱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학문의 토착화'는 도리어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인식하는 태도는 정부 방침에 의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예컨대, 교육부는 대학과 교수의 질에 대한 평가에서 해외의 주요 학술잡지에 실린 편수를 우수성의 지표로 거의 절대시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하에서 한국의 사회과학자들이 외국 이론의 추세를 따라 잡기에 급급하다는 사실은 하등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상환 박사(1996)가 정리한 한국 사회과학의 철학적 배경은 이러한 추세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과학 연구들은 구미의 세 가지 전통-실증주의적 사회과학, 해석적 사회과학, 그리고 비판적 사회과학- 중 하나를 선택하고 있다고 한다. 첫째는 콩트와 뒤르켐, 러셀, 헴펠, 포퍼 등의 전통이고, 둘째는 베버, 슐츠, 후설 등의 전통이며, 셋째는 마르크스, 하버마스 등의 전통이라고 한다. 문제는 이 유명인사들의 목록 중에 한국인이 포함되어 있느냐보다 이들의 연구방법과 학문적 조류가 과연 우리의 문제를 다루는 데 적절하냐의 문제이다.

한국의 사회과학계가 외국의 이론을 따라잡기에 급급한 것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와중에서 우리의 문제의식에 해당하는 주제들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예컨대, 많은 문헌들이 민주주의의 정착과 효율적인 체제 수립을 21세기 사회의 첫 단계로 상정하면서도 경제력 집중 완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다. 21세기 사회를 다룬 문헌들의 저자들이 민주화를 다룰 때는 거의 대부분 이 문제를 반드시 거론했었다는 사실로 볼 때 더욱 이상한 일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한국 사회의 지나친 경제력 집중은, 그대로 두는 경우에, 한국 사회를 금권정치와 천민자본주의로 인도할 것이다(백종국 1993). 이러한 체제에서 효율성을 바랄 수 없다는 것도 너무나 자명하다. 한국 사회에서 경제력 집중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헌들은 21세기 사회를 명분으로 도

리어 경제력 집중을 강화하는 방안들을 제안하고 있다. 최병선 교수는 산업피해 구제과정의 정치화를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사양산업은 사라지게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합리적 경제과정의 정치화를 방지하자는 취지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소위 '사양산업'에 대한 견해는 주의를 요한다. 최 교수의 견해에 따르면, 무역자유화에 역행하므로, 대외적 공신력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므로, 유한한 자원을 성장산업에 투자해야하므로, 성장산업은 정치적으로 약하고 사양산업은 정치적으로 강하므로, 그리고 사양산업이 사양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사양산업을 보호하려는 "이러한 유혹은 철저하게 막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노화준/송희준] 1994, 82쪽)."

이 논의의 신자유주의적 편견에 대하여는 이미 설명이 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주요한 분석적 요건은 다시 강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최 교수의 견해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사양산업은 정치적으로 강하고 성장산업은 정치적으로 약하다고 한다. 현실은 도리어 그 역(逆)이다. 중소기업은 소위 '사양산업'에 대기업은 소위 '성장산업'에 집중되어 있다. 정작 나타날 수 있는 정치적 왜곡은 국내의 한정된 자원을 집중시키기 위해 대기업이 그들의 막강한 정치력을 동원하여 중소기업의 업종을 사양산업으로 낙인 찍을 가능성이다. 대기업들은 심지어 성장산업에 해당된다 싶으면 중소기업이 천신만고 끝에 개발한 고유업종이라 할지라도 방대한 재력과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단번에 독점해버림으로써 중소 기업들을 도태시켜버리는 것이 사실이다.[5] 이 추세를 시장의 원리나 개방화, 자율화로 정당화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아무래도 사회적 강자들이 이러한 추세를 주도하는 것이므로 이론적으로도 이 추세에 편승하는 것이 더욱 손쉬울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유혹을 끈질기게 이겨내지 않으면 안된다.

몇몇 설득적인 문헌들은 공동체의식에 입각한 민주화야말로 21

5) 예를 들면, 페인트를 비롯한 석유화학 및 가전제품 제조업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한겨레신문』 1994년 5월 2일자, 7면 참조.

세기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위 '제3의 길' 논쟁이라고 불리는 현상이다. 윤영관 교수의 견해를 빌면, 21세기의 국제화는 국내의 집단간에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의 상충은 정치적 갈등을 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경우 21세기 사회를 위한 효율적인 산업구조 조정이나 국제경쟁력의 제고는 불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21세기 사회전략의 첫 단추는 민주화로 시작되어야 한다. "결국 효율성에 대한 정치경제적 접근, 즉 세계화의 국내정치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없이는 장기적으로 효율성 자체를 강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정책결정자들이나 국민들이 인식하는 것이 급선무이다(윤영관 1994, 18쪽)."

임혁백 교수도 이와 유사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가 관찰하기로 후쿠야마 류의 신자유주의자들은 현 시대에 시장과 민주주의가 행복한 결합을 하고 있다는 성급한 결론에 빠져 있다(임혁백 1994). 세계화는 전반적으로 국가를 약화시키며 시장을 강화할 것이다. 이 추세는 다수의 국민들을 '눈물의 골짜기'로 인도할 것이다. 제3세계에서는 국제화 논리를 앞세워 진행되는 민영화, 탈규제화, 안정화 정책들이 일반적으로 경제적 약자에게만 그 짐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따라서 민주화도 후퇴하게 된다. 서구의 경우라고 예외는 아니다. 국제화라는 논리로 기업주권이 인민주권을 대체하게 되므로 자본과 노동 사이에 이루어져 왔던 역사적 타협체제가 붕괴하게 된다. 이로서 간신히 이루어 놓은 복지제도는 해체되고 노동자 대중은 정치적 시민권만을 가진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21세기 사회에 대한 대응으로서 복지국가의 강화를 강조하는 입장도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이내영 박사는 한국 정부가 새로운 개방 시대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약자와 패자를 위한 복지제도를 확대하고 분배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내영 1995). 이는 마치 송호근 교수의 '복지자본주의' 개념처럼 하나의 정책방향으로서 매우 강조되고 있다(송호근 1995).

21세기 사회를 '국가역할의 약화', 다시 말해서, '국가의 시장개입 약화', 더 특정적으로 말해서, '복지국가적 기능의 소멸'이라고 해석하는 일련의 태도와 비교하면 매우 흥미 있는 태도이다.

복지화와 국제화가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개념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복지화와 국제화가 어울릴 수 있다는 주장은 아직도 개발 중에 있다. 이내영 박사는 체제의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체제가 실용주의적 정치, 투명한 정치, 효율적 행정, 정책대 결의 정치로 발전하면 국제화와 복지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마 이 박사의 견해는 필자와 다른 것 같다. 필자의 견해에 따르면, 한국의 정치는 이미 지나치게 실용주의적이다(백종국 1993). 또한,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정책의 정향이 복지화로 나갈 것인지는 의문스럽다. 이 문제는 몇몇 서구의 정부들이 탈복지화와 더불어 효율적 행정을 강조하는 것으로 잘 이해될 수 있다. 송 교수는 인적 자원 개발이라 는 측면이 국제화와 복지화를 양립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적 범위에서는 매우 타당하다. 그러나, 인력개발이 기업의 범주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더 현실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하튼 여기에서는 설명의 불충분함과 주장의 정당성은 거의 별개 문제라는 점을 강조해 두고 싶다. 이 주제는 장래의 연구과제로 남아있다.

21세기 사회 전략에는 효율적인 정부의 구성이 우선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김형렬 교수의 견해에 따르면, "만일 정치 · 행정 체계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다른 체계에서의 국제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한다([노화준/송희준] 1994, 217쪽). 이는 21세기 사회 전략에서 흔히 대두되는 경제우선론과 대치되는 견해라고 할 수 있다. 김 교수는 정치 행정의 21세기 사회 대책으로 자유민주주의 정부 정책, 정책형성 과정의 체계화, 창도적 지도성의 확립, 법체계의 개선,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 국제적 정보체계 정립, 전략적 계획의 수립, 국제화 정책 조정기구의 개편, 행정절차의 간소화, 국

제적 공공관계의 개선 등을 들고 있다. 이 대책 중의 어떤 것은 확실히 21세기 사회 전략으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창도적 지도성의 확립과 같은 대책은 너무나 보편적일 뿐 아니라 논쟁적이다. 예컨대, 이러한 대책은 전 시대를 통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반면에 이 대책이 자유민주주의 정부의 정착과 잘 어울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논의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21세기에 진행될 한국의 사회과학은 여전히 민주화, 복지국가, 민족통일이라는 3대 주제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적지 않은 사회과학자들이 여전히 과학의 가치중립성을 믿으면서 수입학문으로서 사회과학을 생활자료 획득의 정당성으로 믿고 의지할 것이다. 그러나, 21세기에 사회과학의 진정한 의의를 살피는 경향이 약간만이라도 한국 사회에서 나타난다면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토착화의 경향도 더욱 강해질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사회과학의 역사성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수립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각자의 입장을 수립한다고 해서 반드시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하지는 않는다. 도리어 진정한 역사 인식은 많은 진지한 학자들 사이에서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한국의 사회과학을 볼 때 나타나는 그러한 합의를 예로 들 수 있다.

5. 사회과학, 복음의 역사성과 복음적 분업

21세기에 전개될 한국의 사회과학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올려야할 점은 사회과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예로부터 수없이 지적되어온 바이지만 어떤 학문은 그 학문에 종사하는 학술공동체의 존재에 의해 존재한다. 한국의 사회과학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의 정치학자, 경제학자, 사회학자, 교육학자, 행정학자, 심리학자, 경영학자들이 없으면 한국의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교육학, 행정학, 심리학, 경영

학도 없다. 이들은 각 분야의 연구업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삶의 보람을 찾으며 역사를 움직이는 데 동참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사회과학을 알려면 이 공동체들의 특징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제일 먼저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사항은 한국의 학술 공동체들이 가지는 이원론적 태도들이다. 삶 혹은 실천과 이론과는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거나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태도가 발생하게 된 요인들은 다양하다. 우선, 양반계층의 유한적 자격으로 나타난 학문이라는 전통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실천적일수록 천하게 생각하는 선비정신의 단점이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한국의 사회과학이 수입학문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어차피 이론과 실제는 너무 거리가 멀어 접근을 시도하기가 힘들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사회과학적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지워져야할 과거로 존재하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수 십 년에 이르는 군사독재의 경험이 이론과 실제를 지극히 유리하게 만드는 데 공헌했다. 이 체제하에서 이론을 실제에 적용하려는 사람들은 대개 출세를 위해 이상을 포기한 사람들이었다. 도리어 이상의 부르짖음은 이 군사독재를 제거하려는 정당한 항거로 받아들여졌다. 마지막으로 학문 일반이 가지는 '매개의 변증법'을 들 수 있다. 학문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주장할 수 있다면 누가 돈을 내고 배우겠다고 하겠는가? 이론은 가급적 어렵게 포장되고 무언가 신비로운 것처럼 나타나야한다. 가급적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할수록, 현실과는 무관한 태도를 취할수록 학자로서의 가치를 더 인정하는 분위기를 들 수 있다. 물론 그럴수록 이론과 실제의 거리는 멀어지기 마련이다.

이미 지적한 바이지만 한국의 사회과학에서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현상은 몰역사성이다. 진리가 불변이라는 사실과 어떤 역사 안에서 무슨 진리를 추구해야 하는가라는 적실성의 고려가 뒤섞여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어떤 경영학자가 기업의 이윤극대화야말로 경영학의 목표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일정한 역사적 맥락 내

에서만 정당하다. 만일 어떤 사회가 비교적 균형 잡힌 시장경제체제를 지니고 있다면 한 회사의 이윤극대화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가에 순기능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만일 어떤 사회가 극단적인 독과점 체제에 사로잡혀 있다면 어떤 독과점적 기업의 이윤극대화는 사회 전체의 역기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만일 어떤 체제가 몇몇 외국회사에 의해 독과점되어 있다고 했을 때에 그 외국회사의 이윤극대화는 그 체제의 복지를 악화시킬 것임이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학문으로서의 한국 사회과학 일반은 빈번히 이러한 고려를 도리어 비 학문적인 것으로 고려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원론적 태도와 몰역사성은 근본적으로 사회과학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일차적으로 우리는 사회과학의 주체인 사회과학자와 대상인 사회가 둘 다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고려해야한다. 당연히 사회과학의 외피를 입고 나타나는 어떠한 이론, 사상, 명제, 혹은 저술들도 불완전한 사유와 조사 활동의 결과이다. 인간이 진리에 가까이 갈 수는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불변하는 진리 그 자체를 완벽히 대변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사회과학 일반의 역사성은 자명한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역사적 존재로서 사회과학자가 역사적 존재인 사회를 고찰한 결과가 일반적으로 역사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어떤 경우에 - 예컨대, 자명한 진리이거나 특별한 계시일 경우에 - 몰역사적인 진리라고 주장될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일지라도 불변의 진리가 쓰고 나타나는 역사적 외피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벌써 우리는 진리를 표현하는 언어의 구조와 관습에 진리를 구속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러한 언어의 구조와 관습은 역사적으로 구성되어온 것이다.

사회과학의 주체인 인간이나 대상인 사회가 도덕적/윤리적 존재라는 점을 고려해야한다. 오래된 명제이지만, 인간은 인식적일 뿐 아니라 도덕적이다(강영안 1998, 202). 과학을 한다는 사실은 단지 무엇이 어떻게 존재하느냐만을 연구하는 행위가 아니다. 학문의 주체로서 인

간도 문제이지만 학문의 대상인 사회는 어떻게 존재할 것이냐는 데 대한 관심을 불가피하게 요청한다. 사회과학 일반의 입장에서 보자면 단지 대상을 분석하는 데 그치는 것은 환자를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배를 가르기만 하는 행위와 유사하다. 혹은, 성서의 유명한 예를 들자면, 귀신이 잠시 외출하자 깨끗이 청소만 했던 집과 유사하다. 그 청소한 집에(그전 귀신보다 더 강력한) 새 주인을 들이지 않는다면 일곱 귀신이 쳐들어와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나빠질 것이 틀림없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무엇을 향한 자유에 대한 고려가 불가피하다.

사회과학은 그 방법론에서도 자연과학과 달리 커다란 제약하에 놓여있다. 일차적으로 실험불가능성이라는 사실을 들 수 있다. 탐구의 대상이 인간 자신이라는 사실 때문에 어떤 이론을 실험하기가 쉽지 않다. 전쟁의 결과를 탐구하기 위해 어떤 사회를 전쟁으로 몰아 넣을 수는 없는 일이다. 물론 불타오르는 로마를 묘사하는 장엄한 시를 짓기 위해 로마를 불태우는 폭군 네로가 있을 수 있고, 왕후 달기가 주장하는 바처럼 과연 정강이뼈가 비어있는가를 보기 위해 왕궁 앞을 지나던 청년의 다리를 잘라보는 상나라의 주왕과 같은 이가 있을 수 있다. 때로 자유시장경제 이론이 적용되는지를 시험해 보기 위해 멀쩡한 나라에 외환 위기를 불러일으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들은 대부분이 민중의 봉기로 곧 혹독한 반대급부를 초래하기 마련이었다.

사회과학적 방법의 제한 때문에 발생하는 방법론상의 유추(derivation)와 회피(deviation)도 한국의 사회과학이 21세기 사회를 분석하는 데 유의해야할 측면들이다. 유추는 사회 현상에 대한 적절한 방법 부족을 자연과학적 실험결과로 대치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빈번히 자연과학적 용어와 가설과 명제들이 사회과학에서 사용되고 있다. 예컨대,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는 곧잘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용어로 원용된다. 회피는 더 엄밀한 사회 과학을 위해 계량화되는 분야로만 연구의 방향을 몰아가는 태도를 말한다. 최근에 합리적 선택 이론이 게임이론의 발달에 힘입어 대선풍을 일으키는 현상과 같다. 혹

은 밀그램 실험처럼 전혀 예기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어느 경우에서나 불가피한 측면은 인정한다 할지라도 역사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균형을 잡지 않으면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국적 상황은 21세기의 한국 사회과학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경제성장이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후발주자의 이익(advantages of late-comers)"이 학문 분야에서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한국의 사회과학자들은 축약효과(telescoping effect)를 누릴 수 있다. 서구에서 수백 년간 연구해왔던 업적들을 우리는 불과 수십 년만에 따라잡을 수 있다. 물론, 여기에 동양의 성과를 가미할 수도 있다. 둘째, 학습효과(learning effect)를 누릴 수 있다. 서구의 연구들이 보여주는 시행착오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서 새로운 나름대로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여지가 주어져있다. 셋째는 한국 자체가 생동하는 사회과학의 실험실이라는 점이다. 한국은 짧은 시간 안에 서구의 근대화를 따라잡고 있다. 그만큼 역동적이며 다양한 힘과 사상들에 대한 수용력도 강하다. 한국 사회는 그 자체가 각종 이론을 위한 거대한 실험실이다.

만일 사회과학이 단지 '무엇의 과학'이 아니라 '무엇을 향한 과학'의 성격이 강하다면 어떤 사회과학자의 세계관은 매우 중요하다. 이 점에서 그리스도인 사회과학자들은 그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누구이든 삶의 목표가 이미 결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벌써 초월적 신의 명령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있다. 문제는 그 명령 혹은 부르심이 무엇이냐 하는 데 대해 해석이 분분하다는 점이다.

분분한 해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복음의 역사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6] 하나님의 명령, 부르심, 혹은 복음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첫째는 형식이고 둘째는 본질이다. 기도, 헌

6) 백종국, "한국기독교의 역사적 책임" 임성빈 엮음. 『한국교회와 사회적 책임』 (서울: 장신대출판부, 1997), 54-84.

금, 예배, 세례 등의 형식은 복음이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갖가지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본질은 그 형식이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이 본질은 다시 보편적인 것과 역사적인 것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하나님의 명령 중 가장 보편적인 내용은 바로 '인애와 공평과 정직의 실천(렘 9:23 -24)' 이다. 이 점은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바로서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 본질적 내용은 역사 속에서 각 개인과 민족들에게 특정한 형태로 - 논란의 여지를 가지고 - 나타난다. 모세의 역사성은 히브리 민족의 출애굽이었으며 다윗의 역사적 소명은 이스라엘 왕국의 건설이었고 예레미야의 소명은 그 왕국의 붕괴에 대한 예언이었다. 모두 다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예표로 나타나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참여자로 묘사되지만 각자가 수행한 소명은 다르다는 점을 잘 이해해야 한다. 같은 시대에서일지라도 소명은 각자 다르게 나타난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전도자라면 바울은 이방인들의 전도자로 나타나는 것과 같다. 이러한 역사성을 무시하면 곧 무지와 독단의 비극에 빠지게 된다.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복음의 역사성은 민주화와 복지국가, 남북통일이라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 주제들은 모두 한국 사회내에서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실현하는 역사적 방향이다. 물론, 이러한 방향들이 그 자체로 본질의 보편적 부분을 전부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도리어 특수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만일 달성된다면 이미 목표로서의 성격은 사라지는 것들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21세기의 한국 사회를 다루는 사회과학자들이, 기독교 신앙의 유무를 막론하고, 민주화와 복지국가와 남북통일을 최대의 목표로 삼고 있다는 사실이 이채롭다. 아마도 이는 일반은총의 존재를 증명하는 사실이라고 말해야할 것이다.

복음적 분업은 복음의 역사성을 수행하려는 그리스도인 사회과학자들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이미 현대 사회과학은 한 학자가 자신의 생애 내에 다 다루기에는 너무 넓고 깊게 발달했다. 아무리 컴퓨터나 정보통신기술의 도움을 받는다 해도 모든 분야를 다 다루기

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더구나, 분업은 효율성과 공동체성을 증가시켜준다. 아담 스미스 박사의 정리에 따르면, 분업은 시간을 절약시키고 전문화를 증가시키며 기계화를 가능하게 해준다. 이는 분업의 일반적 효능이라고 할 수 있다.

복음적 분업이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가기 위해 지상의 성도들이 성스러운 공동체로서 가지게 되는 일의 분담(롬 12:4-5)으로서 성경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각자의 일을 맡기셨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구약성경에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했던 충고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조직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물론 바울 서신도 복음적 분업이 성도의 여러 차원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하는지를 잘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분업의 일반적 효능을 복음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첫째 복음적 분업의 강조는 부르심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 이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중요하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꾀하지 않고 도리어 천하게 여기는 잘못된 풍조가 유행하고 있다. 성령을 받으면 무조건 성직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풍조는 공과계통 학생들이 유난히도 신앙적 딜레마를 심하게 앓는 현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회과학내에서도 복음적 분업의 포기 혹은 학문과 신앙을 대립적으로 보는 이원론적 신앙은 현저하다. 예컨대, 한국선거연구회에는 삼십 명이 넘는 정치학자들이 소속해 있다. 여기에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있다. 그러나, 선거 때마다 우리는 이 분야와 상당히 거리가 있는 정치학자들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도 논평을 해야 하는 답답한 상황을 보고 있다. 한국의 선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에 맞추어 해석하고 논평하는 일이 결코 무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단지 기독교 언론들이 선거 문제를 복음적 관점에서 다룰 학자들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속히 교정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이다.

둘째 복음적 분업의 강조는 '만인제사장' 이라는 혹은 '영역주

권' 이라는 매우 중요한 측면을 부각시켜준다. 한국 교회의 또 다른 병폐는 교회의 직분들을 일종의 계급으로 여기고 무조건 상향 이동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인정받으려는 풍조이다. 이 풍조가 실로 얼마나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지 모른다. 모든 직분은 다 동등하고 신령하며, 모든 삶의 영역에는 다 하나님의 주권이 적용되어야한다는 극히 기본적인 원칙조차도 잘 이해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대부분의 정상적인 직업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복음적 분업의 한 형태이며 현실적 시간과 공간에서 나타나는 봉사의 증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루터처럼 "구두 수선공, 대장장이, 농부는 각기 자기들의 일과 직무를 맡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다 성별받은 사제와 주교와 같다" 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7]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그리스도인 사회과학자들의 학문활동에서 다원성의 인정과 전문성의 심화, 창조성의 계발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무한하신 분의 부르심이 가질 수 있는 다양성을 생각한다면 학문의 다양성에 대한 관용은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전문성의 심화도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무한한 하나님의 신비에 접근하는 태도가 피상적이거나 부정직해서는 안된다. 전문성의 약화는 대개 불성실의 증거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사회과학자의 전문성 심화와 복음적 분업은 잘 어울리는 현상이다.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의 영역에 가까이 갈수록 학문적으로는 창조성의 계발이라는 행태를 띄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어떤 그리스도인 사회과학자가 자신의 신앙을 학술적 창조성 계발의 장애물로 인식하고 있다면 그는 자신의 신앙이 올바른 것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8]

반면에 분업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소외와 왜곡이라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전체 학문과정의 극히 일부분만

---

7) 말틴 루터, 지원용 역. 『종교개혁 3대 논문』 (서울: 컨콜디아사, 1993), 26쪽.

8)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올바른 신앙(칼빈주의)는 학문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그 영역을 회복시켜준다"는 카이퍼의 말은 매우 타당한 점이 있다. 아브라함 카이퍼, 서문강 역 『삶의 체계로서의 기독교』 118쪽

다루다 보면 자신이 왜 이러한 연구를 해야 하는지를 의심할 때가 있다. 특히, 매개의 변증법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경향을 '학문적' 이라고 자위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심각한 증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만일 이러한 증상을 학문의 필연적 결과라 위안하거나 학문공동체에서 나타나는 시장원리가 조정해줄 것이라고 믿는다면 개인적인 소외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학문공동체 전체의 왜곡도 현저해질 가능성이 있다.

복음의 역사성에 대한 인식은 복음적 분업이 초래할 수 있는 소외와 왜곡을 해결해 준다. 그리스도인 사회과학자라면 모름지기 복음의 본질인 '인애와 공평과 정직의 실천' 을 기점으로 하는 분업적 체계상에서 자신이 어디쯤 있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해야한다. 특이한 신학적 주제에 매달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아마도 그리스도인 사회과학자들의 공동체가 조직되어 있다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말할 필요 없이, 그리스도인 사회과학자들은 삶의 각 수준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학문적 분야를 막론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한다. 예컨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과 같은 기독시민운동에의 참여는 자신이 막연히 생각했던 복음적 분업의 위치를 점검하는 데 귀중한 경험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도서

Drucker, Peter *F., Post-Capitalist Society* (New York: Harper Collins, 1993), 이재규 역,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3).

Huntington, Samuel P. *The Clash of Civilizations*, 이희재 역 『문명의 충돌』 (서울: 김영사, 1997).

Kennedy, *Paul, Preparing for the Twenty-First Century* (New York: Random House, 1993), 변도은 · 이일수 공역, 『21세기 준비』(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3) Krugman, Paul R., "Competitiveness: A Dangerous Obsession", *Foreign Affairs* (March/April 1994): 28-44.

Landes, David S., *The Unbound Prometheus: Technological Change and Industrial Development in Western Europe from 1750 to the Pres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9)

Lowe, Janet, *The Secret Empire: How 25 Multinationals Rule the World* (Homewood: One Irwin, 1992), 이대환 역, 『비밀제국: 25개 다국적 기업이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가?』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3)

Mann, M., "Nation-states in Europe and Other Countries: Diversifying, Developing, Not Dying", *Daedalus* 122 No. 3. (1993)

Meinecke, Friedrich, *Die Idee de Staasr son in der neueren Geschichte*, 이광주 옮김, 『국가권력의 이념사』(서울: 민음사, 1990)

Naisbitt, John. *Global Paradox*, 정성호 역, 『글로벌 패러독스』(서울: 세계일보, 1994)

Nollen, Stanley D., and Dennis P. Quinn, "Free trade, fair trade, strategic trade, and protectionism in the U.S.Congress. 1987-88", *International Organization* 48 (Summer 1994): 491-525.

Rogowski, Ronald, *Commerce and Coalitions: How Trade Affects Domestic Political Alignment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9).

Sweezy, Paul M., "The Triumph of Financial Capital", *Foreign Affairs* (June 1994).

Toffler, Alvin, *Future Shock* (1970), 이계행 역, 『미래 쇼크』(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5).

Toynbee, Arnold J., *A Study of History, Volume VI*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3).

21세기위원회 편, 『2000년에 열리는 통일시대』(서울: 동아일보사, 1993)

_____, 『21세기의 한국과 한국인』 (서울: 나남, 1994)

강영안, 『자연과 자유 사이』 (서울: 문예출판사, 1998)

강정인, "세계화 그리고 민주주의의 미래", 강정인 · 김세걸 편, 『현대 민주주의론의 경향과 쟁점』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4),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편, 『위기의 세계와 한국』 (서울: 나남, 1994)

경실련 정책연구위원회 편, 『우리사회 이렇게 바꾸자: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개혁과제』 (서울: 비봉출판사, 1992)

공보처, 『국민이 열어가는 국제화시대』 (서울: 공보처, 1994)

공유식, "세계화와 한국문화: 문화적 폐쇄성의 극복", 『계간 사상』 (1995년 봄): 193-215.

공인숙 · 노영주 · 성미애 · 송혜림 · 이승미 · 이완정 · 최연실, "기술에서 과학으로; 과학에서 인간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4 (1996): 442-467.

구자순, "21세기 정보사회와 정신문화", 한국사회학회 편 『정보화시대의 미디어와 문화』 (1998): 108-128.

구종서, "범(汎)한민족주의가 21세기 한국(韓國)의 선택", 『WIN』, 1995. 8. 176-179.

김동춘, "'국제화'와 한국의 민족주의", 『역사비평』 27 (1994년 겨울): 40-54.

김병국, "지역주의: 생존전략의 다층화", 『계간 사상』 (1995년 봄): 10-51.

김병로, "세계화와 통일한국: 그 의미와 과제", 『계간 사상』 (1995년 봄): 216-251.

김석준, 『한국자본주의국가위기론』 (서울: 풀빛, 1990)

김성국 · 임현진, "한국사회와 사회과학" 『한국사회학』 7 (1972): 85-96.

김성한, "세계화, 분권화, 지방화", 『계간 사상』 (1995년 봄): 81-110.

김성훈 편, 『WTO체제하의 한국 농업의 활로』 (서울: 비봉출판사, 1995)

김세원, 『국제경제질서의 변화와 한국경제의 선택』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3)

김영호 외 7인, 『한국의 2001년 설계』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5)

김진균, "'세계화' 패러다임과 한국", 『경제와사회』 22 (1994년 여름): 28-45.

김태현, "세계화 시대의 국가안보전략", 『국가전략』 (1995년 봄 · 여름): 191-199.

김학준, 『한국정치론사전』 (서울: 한길사, 1990)

김호기, "세계화와 국민국가의 위상", 『계간 사상』 (1994년 겨울): 108-134.

남덕우, "세계화의 역학과 우리의 대응", 『계간 사상』 (1995년 여름): 294-310.

노화준 · 송희준 편, 『세계화와 국가경쟁력: 21세기의 국가 경영전략』 (서울: 나남, 1994)

동아일보사 편, 『2천년대를 향한 한국의 선택』 (서울: 동아일보사, 1991)

문정인, "세계화의 위협구조와 국가전략: 신중상주의의 가능성과 한계", 『계간 사상』 (1995 년 봄): 51-80.

박길성, "근대성에서 세계성으로: 세계화와 한국사회", 『계간 사상』 (1994년 겨울): 42-71.

박명규, "국제화, 지역화속의 한국사회-역사적 접근-" 『경제와사회』 22 (1994년 여름): 46-71.

박재창 편, 『정보사회와 정치과정』 (서울: 비봉출판사, 1993)

박태건, 『조지 소로스의 핫머니 전쟁』 (서울: 동녘, 1995)

배규한, "미래사회론", 한국사회학회 편, 『21세기의 한국사회학』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4), 469-509쪽.

백종국, "한국의 국가, 시민사회, 그리고 지배연합의 변동-신중상주의적 지배연합에서

천민자본주의적 지배연합으로-" 이수훈 편, 『한국정치 · 사회의 새흐름』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1993), 133-176.

_____, "국제화시대에 있어서 한국 자본주의의 선택에 관한 문헌 비평", 『한국정치학회보』 29 (1995): 27-67.

백진현, "세계화와 한국의 안보전략", 『계간 사상』 (1995년 봄): 173-192.

사공일, "세계화 시대의 경쟁전략", 『계간 사상』 (1993년 겨울):

성경륭, "국민국가와 초국가체제의 갈등 및 공존: EC와 APEC을 중심으로", 한림대 사회조사연구소 연구논문시리즈 93-36 (1993).

송호근, "세계화와 한국의 사회발전", 『계간 사상』 (1995년 봄): 145-172.

신용하, 『21세기 한국과 최선진국 발전전략: 한국이 미국 · 일본 · 독일을 추월하는 길』 (서울: 지식산업사, 1995)

염무웅, " '국제화시대' 의 민족문화", 『역사비평』 27 (1994년 겨울): 55-66.

유석진, "21세기 질서를 보는 세 시각: 헌팅턴, 후쿠야마, 드러커", 『계간 사상』 (1995년 여름): 266-293.

유팔무 · 김호기 편,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서울: 한울, 1995)

윤영관, "세계화: 민족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위하여", 『계간 사상』 (1994년 겨울): 10-41.

이국영, "신국제질서와 국민국가 성격의 재조명", 『사회비평』 7 (1992): 37-48.

이내영, "세계화속에서의 동북아질서와 한반도", 『경제와사회』 22 (1994년 여름): 72-102.

_____, "세계화와 한국정치", 『계간 사상』 (1995년 봄): 111-144.

이돈희, "21세기의 사회와 한국의 교육", 『교육학연구』 31 (1993): 11-30.

이상환, "질적 · 양적 방법 논쟁: 최선의 사회과학적 추론이란?", 한국정치학회 월례발표회 (1996): 153-168.

이용우, " '개방화' 와 한국자본주의", 『경제와사회』 22 (1994년 여름): 103-137.

이수훈, "전지구화, 지역주의화 그리고 국지화의 특징과 내용", 『경제와사회』 22 (1994년 여름): 236-257.

이한구, "'세계화'는 정책목표가 될 수 있는가?", 『월간 조선』 (1995년 4월): 368-371.

임혁백, "세계화와 민주화: 타고난 동반자인가? 사귀기 힘든 친구인가?" 『계간 사상』 (1994 년 겨울): 72-107.

임현진, "지구시대 한국의 진로: 민족주의, 지역주의 및 세계주의를 넘어", 『계간 사상』 (1995년 봄): 252-279.

장상환, "개방화에 따른 민중운동의 대응", 『경제와사회』 22 (1994년 여름): 138-163.

장석주, 『세기말 글쓰기』 (서울: 청하, 1993).

전상인, "국민국가는 살아있다」, 『대화」 2 (1994)

정규석, 『한국의 세계화전략』 (서울: 21세기북스, 1995)

정성진, "국가경쟁력 강화론 비판", 『이론』 9 (1994년 여름): 220-240.

정수복, "지구환경위기와 국제환경정치", 『계간 사상』 (1994년 겨울): 203-230.

정진영, "신국제경제질서: 국가주권과 국제질서 사이의 새로운 타협", 『계간 사상』 (1994년 겨울): 135-173.

학술단체협의회 편, 『국제화와 한국사회: 진보적 대안」 (서울: 나남, 1994)

_____, 『한국사회의 민주적 변혁과 정책적 대안』 (서울: 역사비평사, 1992)

한국경제정책연구회 엮음, 『한국경제의 새패러다임 모색』 (서울: 한울, 1995)

한국사회학회 편, 『국제화시대의 한국사회와 지방화』 (서울: 나남, 1994)